<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화학산업정책 관련 의혹들!

한보사태의 파장이 「성역없는 수사」라는 외양과는 달리 5조7000억원이라는 거액을 「부정대출」토록 압력을 행사한 부정 · 부패의 「핵심」을 파헤치는 근본을 피하면서 「부스러기-콩고물에도 못미치는 조무라기」 몇명을 「원천」으로 둔갑시켜 교도소에 보냄으로써 마무리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짙게 풍기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검찰을 국민을 대변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사법기관으로 믿는 국민들은 아마 단 한명도 없을 것이고, 검찰이 지금까지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 「권력의 시녀」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처음부터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그리 서운해 할 것은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 「문민정부」를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치권력의 속성 및 검찰 자신의 한계적 사고,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부정 · 부패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현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나 사회정의에는 아랑곳않는 「문민독재」가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착각」 이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정권말기적 현상이라고 자위(?)한 나머지 나름대로 「실체」를 지목하고 유추하면서 각종 유언비어를 통해 「진실」에 근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다만,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국민일반의 「유추」가 정권이 뒤바뀌고나면 대부분 「진실」로 판명된 과거의 선례가 이번에는 뒤업어지길 실낱같이 기대할 뿐이다.

즉, YS정권이 부정 · 부패와 연류된 정치인이나 관료를 지위고하를 가릴 것없이 모조리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권력의 근저를 애워쌓고 거간꾼 노릇을 하고 있는 주변 또한 말끔히 청소, 국가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보사태」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권력을 핑계로 무작위적이고 무책임한 대출을 자행함으로써 해당은행 및 예금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자들은 물론 국민의 혈세를 축내게 한 은행장이나 은행의 임직원들도 부정대출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정 · 부패에 연관된 모든 자들에게 손해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화학저널은 1991년 5월15일 창간한 이래 정치 · 관료조직의 부정 · 부패 및 권력의 울타리를 맴도는 부패 조장집단이 나라를 망치는 근원이라고 판단, 수십차례에 걸쳐 이의 척결을 강조해왔고, 화학산업과 관련해서도 정책 수립에서 부터 집행 그리고 사후감독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 · 부패와 이를 조장하고 거간노릇을 하는 작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국세를 축내는 행태 등 「화학산업 관련 부정 · 부패」를 과감히 도려낼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화학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60~70년대 공업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부터 무수한 부정 · 부패가 자행돼 왔으며, 80년대 이후에도 NCC를 비롯 투자와 관련한 대규모 부정이 여러차례 거론된 바 있고, 90년대에 들어서도 석유화학 투자조정을 비롯 석유화학제품 수급 · 가격 카르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화학산업 관련 부정 · 부패는 한보사태와 같이 정치권력이 개입된 흔적이 상당하고, 90년대 들어서는 산업정책 관련관료 및 주변의 협회 · 조합이 부정 · 부패의 표본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석유화학 카르텔의 경우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개입됐다는 설도 무성하다.

화학저널은 화학산업 관련 부정 · 부패가 척결되고 투명한 산업정책과 자유경쟁이 자리를 잡을 때 진정한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 YS정권이 들어선 이래 부패의 근원을 파헤쳐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하고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종무소식이다.

한발 나아가 화학산업정책을 수립 · 집행하는 관련부처 관료 및 감시감독기관들이 화학저널의 정상적 보도 및 지적을 개선하기 보다는 이를 해당기업 및 협회에 통보해 대처토록 하는가 하면,관련회사 및 협회를 부추겨 광고를 중단하라는 압력까지 행사하는 웃지못할 행태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화학저널은 이 정도의 압력에 굴할 정도로 나약하지도 않고, 또 여느 사이비 언론과는 다르

다는 점 강조해둔다.

화학저널은 1997년을 화학산업 관련 부정·부패 척결의 원년으로 삼아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화학저널 1997/2/24>